

전북도, 산업·고용 위기 지역 현안 점검

군산 산업·고용위기 지역 현안·지원사업 점검회의 개최
정부추경 반영·지역현실 밀착한 지원사업 추진 동력 확보

전북도는 군산시와 합동으로 군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 추진 및 도·군·군사시 주요현안·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부지사가 주재한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추경 및 목록예비비의 집행과

정상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도민 공감도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직접 현장방문, 협력업체와의 간

담 등을 통해 수렴된 견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수요에 더 밀착하는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고용·산업·자금 분야 총 49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재취업 훈련기반 조성 등을 강화 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신속 절차 이행과 주기적 홍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효과가 제대로 체

김되어도록 조기에 이행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내외 경제환경과 경기위축 등으로 지원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추경조치 집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실행해줄 것과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기자

천정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 대표 발의

“국민의 의견 제출권 보장·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29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 하는 법안이다.

천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큰 전환점을 마련,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큰 이정표가 됐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로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간단한 절차와 권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정파적인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남북합의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비준 동의를 요청한 남북합의서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길등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남북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자리 하향식 지침 한계 상향식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주제
“일자리, 지방이 기획→중앙 지원방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 집행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적 시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

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정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

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에 대한 소회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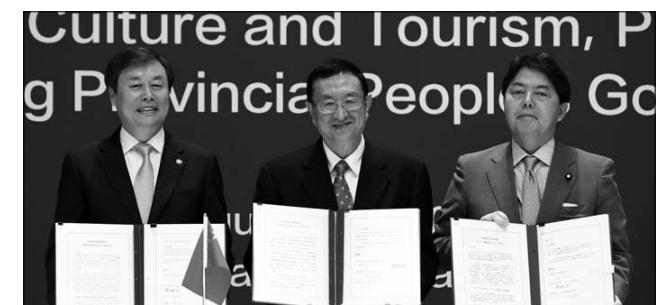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핵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더 큰 진전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혁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기념촬영 하는 한중일 문화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하마시 요시미사 일본 문부과학대신이 30일 중국 하얼빈 송베이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하얼빈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제공)

전북도, 호우 피해대비 대응 태세 강화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도민안전 최우선 조치 만전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전북도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30일과 31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 대비를 위해 긴박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북도가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28~30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기상청에서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도 재난관련부서와 시군 부서가 함께 기존 피해지역의 조기 피해수습과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우대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배수펌

프장 적기 가동, 하천 둔지주차장 차량 사전 대피를 조치토록 하고 침수 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시·군의 자동음성通报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들에게 호우 대비 사전 행동요령을 긴급하게 전파토록 하였으며, TV 자막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호우 특보 발령 전에는 집 주변 배수로와 물고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호우 경보가 발령된 이후 불교위험 우려 지역과 침수피해 예상지역에는 가지 않기 등 국민행동 요령대로 호수 상황에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경진원 ‘세대융합 창업팀 그룹 멘토링 데이’ 개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흥용웅)은 초기 창업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그룹 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선정 창업기업을 대상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협업하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대융합창업캠퍼스’는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속련자와 청년의 이다이어, 기술을 매칭해 역량 있는 창업팀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국책사업이다.

SS창업경영연구소 유성우 대표 등 전문 멘토로 위촉된 각 분야의 창업 및 글로벌 전문가들은 특히 상표 및 법률 회계·세무·자금·크라우드펀딩

창업·마케팅·사업계획 재무·투자 IR 글로벌 사업화 등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한 고충과 어려움 등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상황까지 예방적 성공 로드맵 구축을 견인해왔다.

또한 세대융합 창업기업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운영하여 사업 운영 노하우 공유 및 협업기업 매칭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경진원은 창업기업 아이템의 특수성에 맞는 분야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멘토링도 연중 실시 중이며, 투자유치 사업화 교육 보육시설 등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트럼프, 한국산 철강 퀘터면제에 서명
아르헨티나·브라질산 수입쿼터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포고문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영구히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무역회장법 232조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하는 2개의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미 행정부는 철강 수입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한 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영구 면제 입장을 확인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